

충남연구원 4층 대회의실

충남연구원 미래비전 및 발전방향 워크숍



❖ 추진배경 및 목적

- (위드 코로나 시대의 미래비전) 코로나 팬데믹시대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과 준비
- (지방자치의 강화와 지방의 변화) 지방분권 강화와 대선 및 지방선거 등 지역의 변화에 대한 대응
- (충남연구원의 역할과 미래 발전방향)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으로서의 연구원 위상과 역할, 발전방향 모색

❖ 행사개요

- 일 시 : 2021년 11월 3일(수) 10:00~11:40 (100분)
- 장 소 : 충남연구원 대회의실(4층)
- 참 석 : (도청) 기획관실 정책관리팀
(원내) 실센터장, 노사협의회 대표, 노조지부장
- 발 제 : 지방행정의 변화와 시·도 연구원 역할과 발전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신두섭 기획조정실장)

❖ 시간계획

내 용	시 간		비 고
개회/ 참석자 소개	10:00 - 10:05	5'	사회자
주제발표	10:05 - 11:00	5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신두섭 기획조정실장
토 론	11:00 - 11:40	40'	참석자

Contents

1. 지역 환경변화와 지방행정
2. 지방분권과 자치발전의 현황
3. 충남연구원의 역할과 미래발전 방향

지방행정의 변화와 시도연구원 역할과 발전방향

2021. 11.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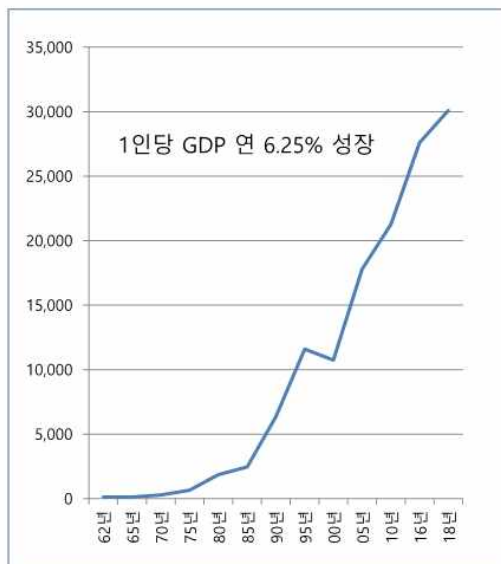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 지역 환경변화와 지방행정

2

빛나는 성과 : 18년 30-50 Club 가입

세계 7번째 인구 5천만 명,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국가 진입



3/28

어두운 그림자 : 국가비상사태-기울어진 운동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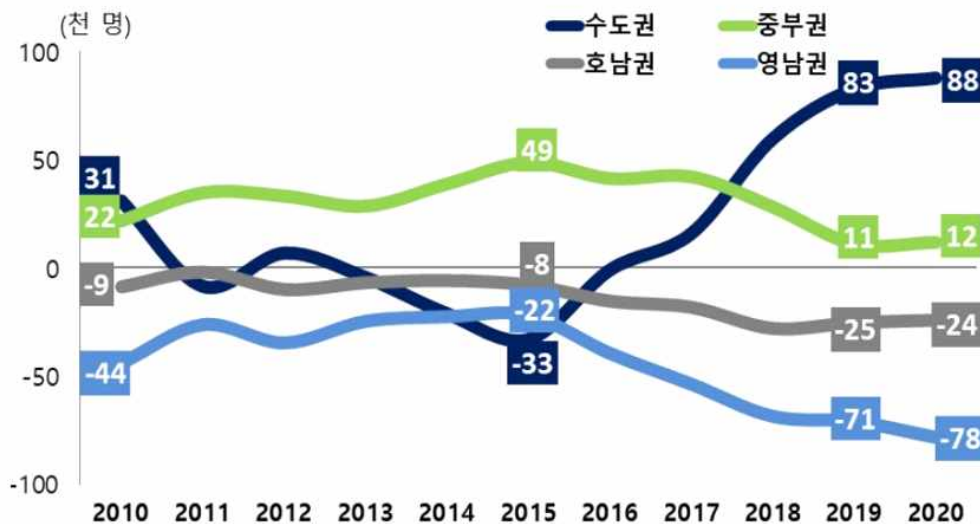
수도권 인구 : 전국 대비 50.3%('21. 6월)



4/28

여전한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권역간 이동자 수 추이(2010-2020, 단위:천명)



2021, 통계청

5/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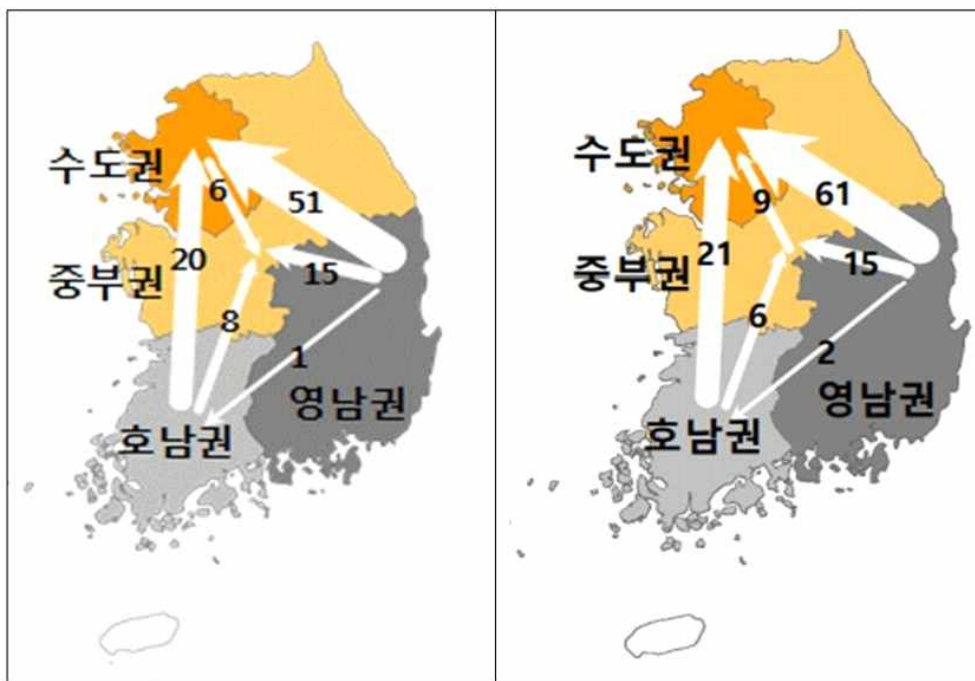
지자체별 주민등록인구 및 노인인구 현황

구분	주민등록인구	노인인구 (노인인구비율)	노인 부양비	노령화지수	소멸위험지수	
서울	9,663,465	1,561,139 (16.1)	22.0	156.3	0.95	주의
부산	3,391,946	657,711 (19.4)	27.7	131.1	0.63	주의
대구	2,410,346	400,494 (16.6)	23.1	140.6	0.73	주의
인천	2,942,020	411,483 (14.0)	19.0	113.3	0.94	주의
광주	1,450,062	205,666 (14.2)	19.6	105.6	0.93	주의
대전	1,463,832	210,734 (14.4)	19.7	114.3	0.92	주의
울산	1,136,017	143,367 (12.6)	17.1	92.3	0.94	주의
세종	355,031	34,881 (9.8)	14.0	40.7	1.43	보통
경기	13,427,014	1,775,315 (13.2)	13.0	93.2	1.00	보통
강원	1,542,840	319,691 (20.7)	30.4	137.5	0.49	위험진입
충북	1,600,837	233,143 (14.6)	25.3	146.3	0.62	주의
충남	2,121,029	406,188 (19.1)	23.1	143.0	0.63	주의
전북	1,304,104	336,203 (25.8)	32.0	132.3	0.49	위험진입
전남	1,351,549	435,330 (32.2)	36.2	205.3	0.41	위험진입
경북	2,639,422	573,715 (21.7)	32.5	192.1	0.45	위험진입
경남	3,340,216	530,253 (15.9)	24.9	135.1	0.62	주의
제주	674,635	106,154 (15.7)	22.5	110.3	0.75	주의
전국	51,029,023	8,496,077 (16.4)	22.9	134.7	0.77	주의

※ 2020년 12월31일 기준, 노인인구는 65세 이상 인구를 의미
 ※ 노인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노인인구, 노령화지수는 유소년인구(14세이하) 대비 노인인구, 소멸위험지수는 여성인구(20~39세) 대비 노인인구를 의미

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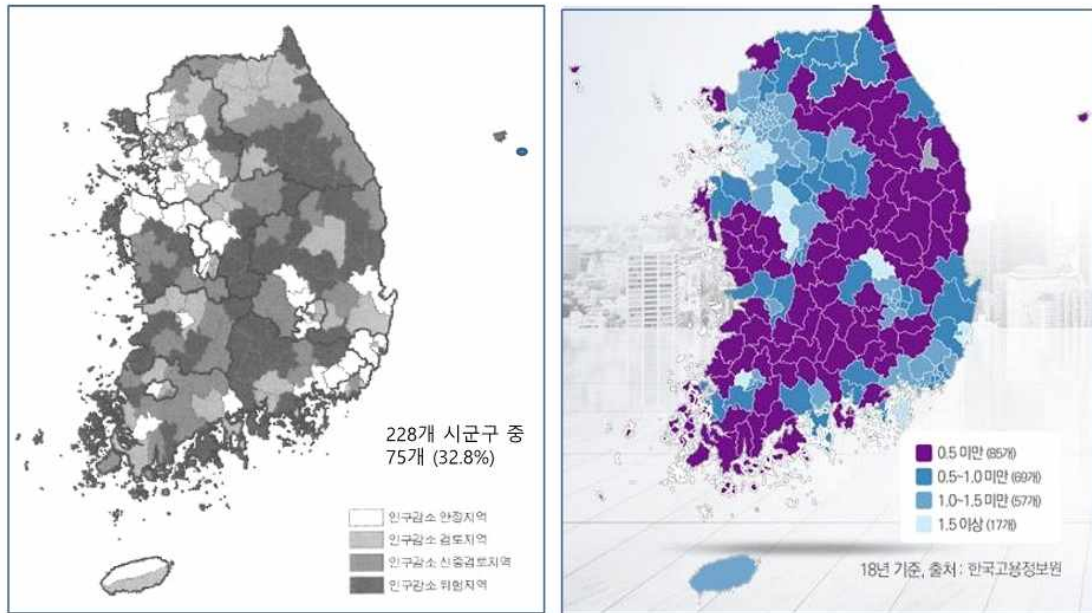
더 심각해지고 있는 수도권 집중 2018년과 2020년 (단위:천명)



출처 :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2019, 2021년

7/28

지방은 소멸 위기 봉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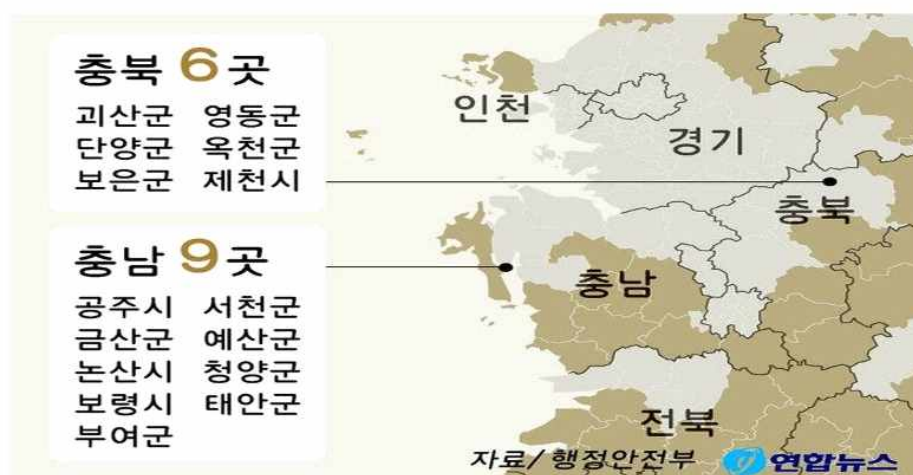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7)

8/28

지방은 소멸 위기 봉착

인구감소지역 지정(2021.10.18): 연평균 인구 증감률, 인구밀도, 청년 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 활용해 산정
* 충남 서남부지역 9개 시군은 모두 뚜렷한 인구 감소 추세



출처: 연합뉴스(2021)

9/28

지역경제 위기와 지역간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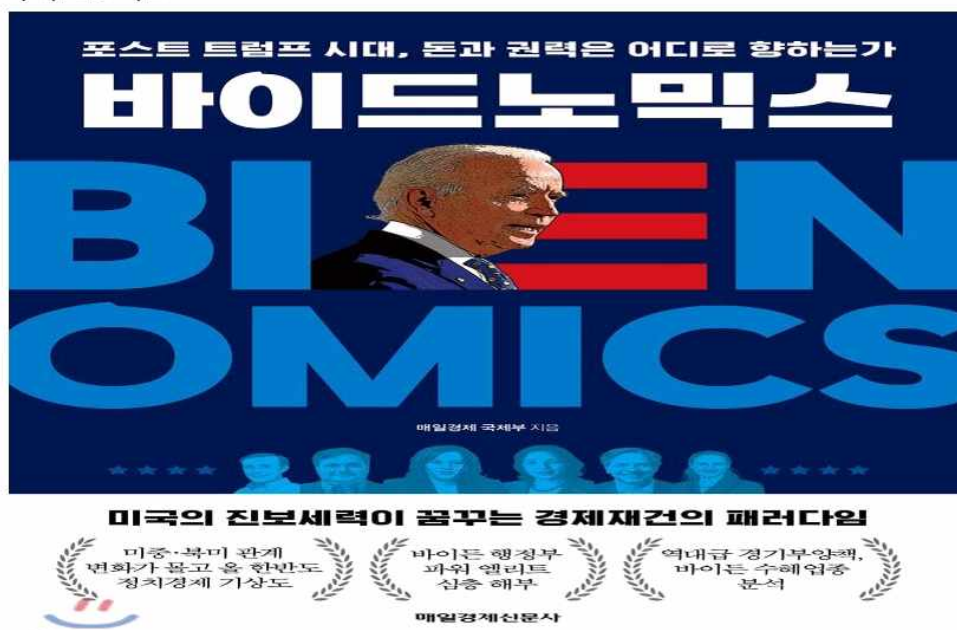
코로나19와 경제위기



10/28

지역경제 위기와 지역간 격차

바이드노믹스



11/28

지역경제 위기와 지역간 격차

바이드노믹스



12/28

지역경제 위기와 지역간 격차

바이드노믹스

바이드 3대 핵심공약과 주목되는 국내 수혜기업

1. 환경: 2조달러친환경 사업에 투자
2050년까지 탄소배출제로
2. 세제: 법인세율 21% => 28% 인상
최저한 세율(15%)신설
3. 복지: 오바마케어 부활,
약값 정부와 협의

자동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한운시스템
풍력	씨에스윈드, 삼강엔앤티, 씨에스베어링
태양광	한화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신성이엔지
배터리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헬스케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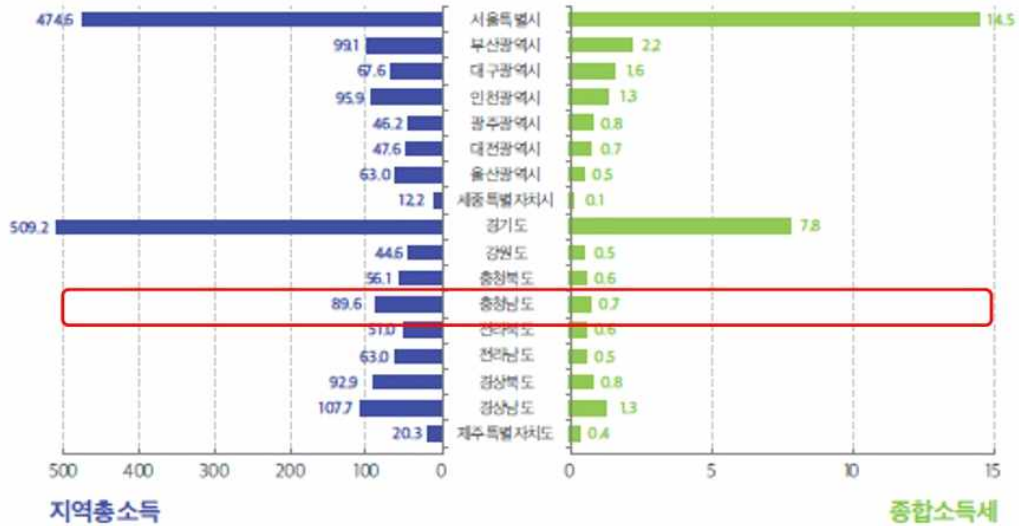
주: 태양광지붕 800만개, 태양광 패널 5억개, 풍력터빈 6만개 설치계획
전기차 및 수소차 의무판매제도입, 정부차량 300만 대를 친환경차로 교체
메티케이트 처방약 가격협상을 의무화
약값 인상을 물가상승률 이하로 제한, 약품 수입으로 가격경쟁을 유도(바이오시밀러 수요 확대)
자료: 김광석(2021)로부터 재인용

13/28

지역경제 위기와 지역간 격차

2019년 시도별 지역총소득과 종합소득세

단위: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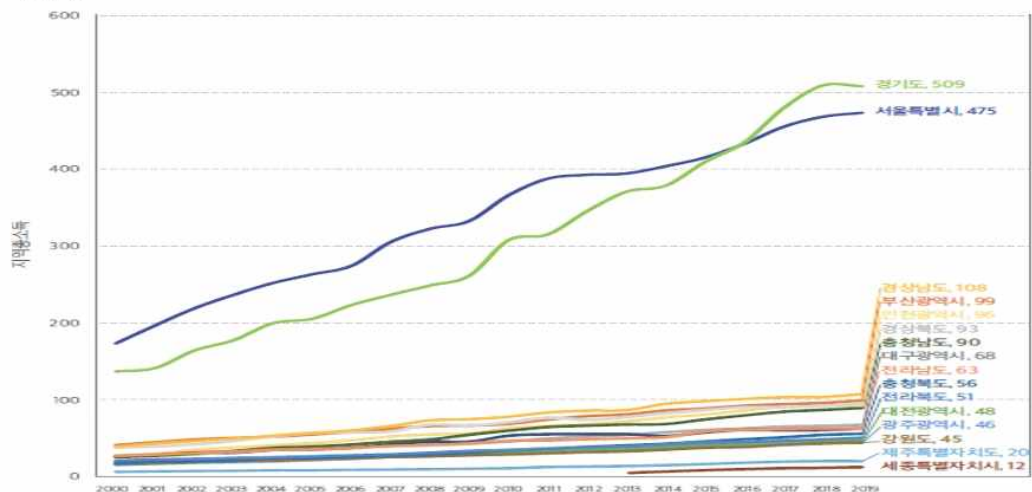
출처: 김태환외(2020),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14/28

시도별 소득변화와 격차

시도별 지역총소득 변화 추세

단위:조원



출처: 김태환외(2020),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15/28

인구증감지역

인천

-증가(2): 강화,옹진

경기

-증가(2): 가평,양평
-감소(3): 연천

충남

-증가(1): 홍성
-감소(6): 금산,부여,서천,청양,예산,태안

전북

-증가(1): 완주
-감소(7):진안,무조,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전남

-증가(1): 무안
-감소(16):담양,곡성,구례,고흥,보성,장흥,강진,해남,함평,영광,장성,완도,신도,신안



강원

-증가(3): 화천,양구,횡성
-감소(8):홍천,영월,평창,정선,고성,양양,철원,인제

충북

-증가(3): 증평,진천,음성
-감소(5):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경북

-증가(1): 칠곡
-감소(12):군위,의성,청송,영양,청도,령,성주,예천,봉화,울진,울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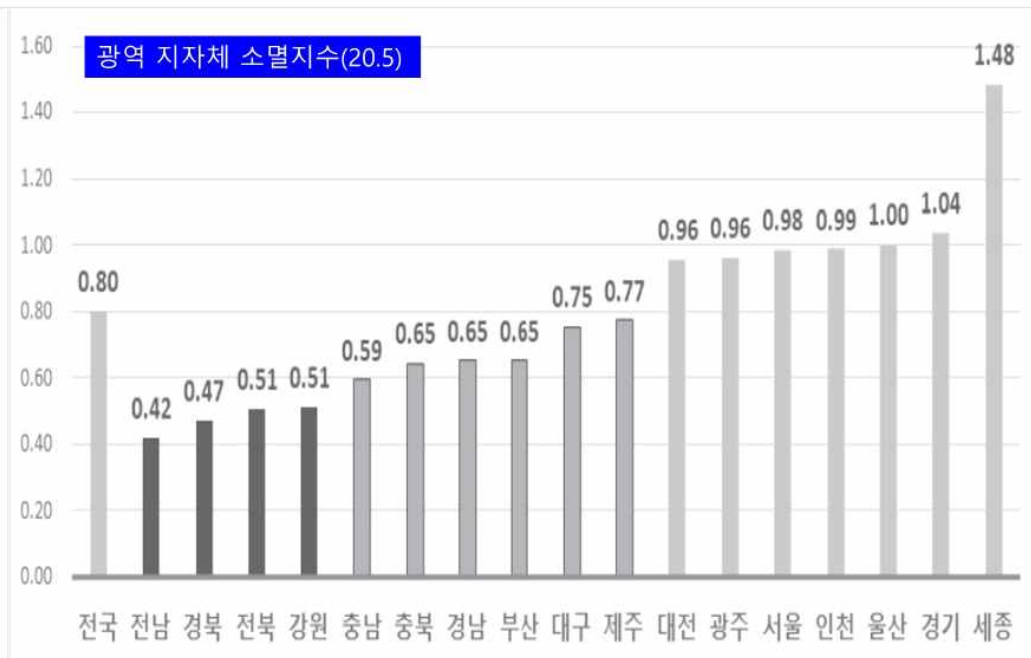
경남

-증가(1): 함안
-감소(9):의령,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 비유출 지역 : 혁신도시,도청,접근성 개선지역

16/28

지방소멸



김세나, 2020

17/28

2. 지방분권과 자치발전의 현황

18

우리나라 분권 수준

자치입법권의 실태

구분	내용
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헌법규정(「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법규 제정
자치법규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례제정(「지방자치법」 제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과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을 전제 규칙의 제정(「지방자치법」 제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 기초법령(「지방자치법」 제2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의 위반 불가

자치입법권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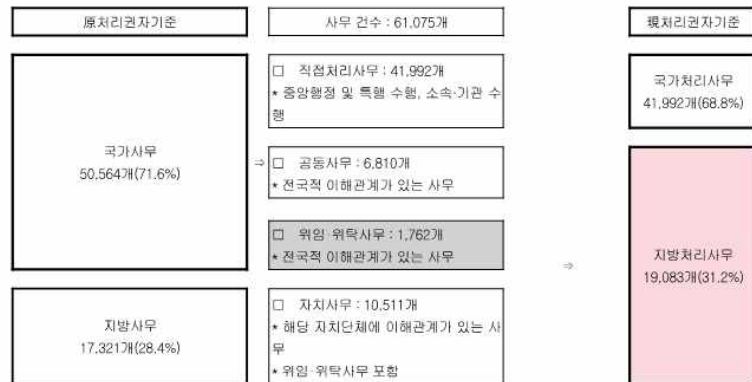
구분	지방자치조직형	지방자치강화형	광역지방정부형	연방정부형
대상 국가	한국	일본	영국	미국/독일
입법권 범위	지방자치법: 법령의 범위 안에서	헌법: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법: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률에 준하는 조례 제정권 부여(법률과 충돌 시 무효)	미국: 법률제정권 부여 독일: 법률의 범위 안에서 조례제정
기본권 제한	불가	불가	불가	가능
법칙 제정권	불가	가능	가능	가능

* 출처: 금창호외(2021), 연구원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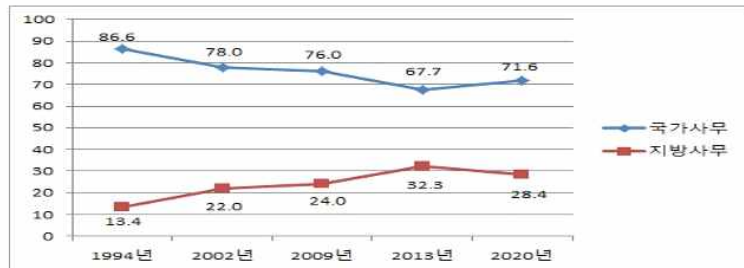
19/28

우리나라 분권 수준

자치행정권의 수준



지방사무 추이분석



* 출처 : 급창호외(2021). 연구원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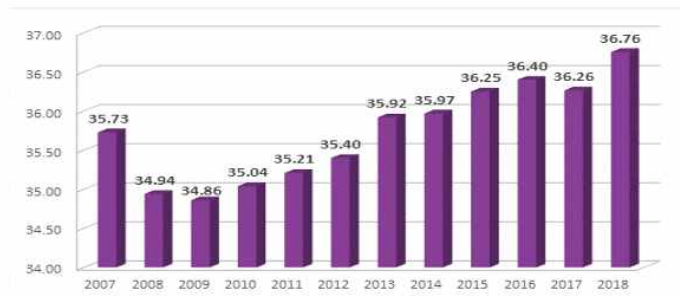
20/28

우리나라 분권 수준

자치조직권의 수준

구분	조직관리 방식	행정 지표
한국	기구 및 정원 의 부분통제	<input type="checkbox"/> (기구) 본청의 실국설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결정 <input type="checkbox"/> (정원) 지자체별 기준인건비를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되,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율성 부여
일본	기구·정원 자율화, 직제변경 신고 및 참고지표만 제시 (간접적 통제)	<input type="checkbox"/> (기구) 조례로 자율화, 표준모양을 제시, 직제 변경시 총무대신에게 신고 <input type="checkbox"/> (정원) 총무성에서 참고지표로 직정 정원 제시 (예) 회계분석(인구, 면적), 유사단체비교(주민1인당 공무원수), 라스파이 레스지수(중앙-지방 급여수준 비교)
영국	기구 자율화, 정원은 간접통제 (간부총 규모 등)	<input type="checkbox"/> (기구) 수석행정관 권한, 운영예산 절감이 결정 기준 <input type="checkbox"/> (정원) 지자체 권한, 인건비가 주요 결정 기준 (예) 중앙에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간접 통제 가능

지방공무원 비율



* 출처 : 급창호외(2021). 연구원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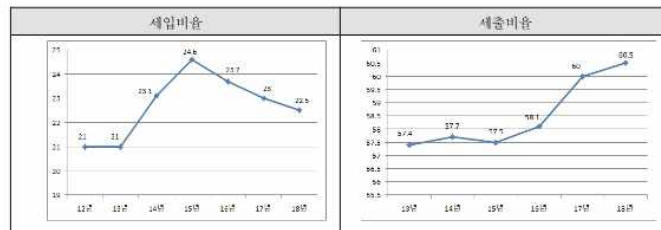
21/28

우리나라 분권 수준

(단위 : 억원)

자치재정권의 수준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세입	국세	2,019,065 (79.0%)	2,055,198 (76.9%)	2,178,851 (75.4%)	2,425,617 (76.3%)	2,510,766 (77.0%)	2,681,947 (77.5%)
	지방세	537,789 (21.0%)	617,225 (23.1%)	709,778 (24.6%)	755,306 (23.7%)	750,239 (23.0%)	779,140 (22.5%)
	중앙정부	1,525,707 (42.6%)	1,579,905 (42.3%)	1,669,023 (42.5%)	1,722,733 (41.9%)	1,691,075 (40.0%)	1,812,512 (39.5%)
세출	자치단체	1,509,667 (42.1%)	1,600,229 (42.8%)	1,694,587 (43.1%)	1,808,523 (43.9%)	1,907,660 (45.1%)	2,080,476 (45.4%)
	지방교육	549,625 (15.3%)	558,879 (14.9%)	563,503 (14.4%)	568,268 (14.2%)	629,893 (14.9%)	693,822 (15.1%)



* 출처 : 금창호외(2021). 연구원 내부자료

22/28

우리나라 분권 수준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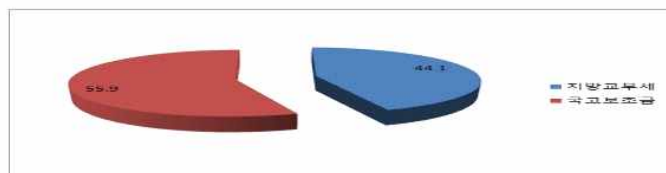
자치재정권의 수준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억원)	1,845,825 (100.0%)	1,931,532 (100.0%)	2,106,784 (100.0%)
자체수입(억원)	866,726 (47.0%)	935,253 (48.4%)	1,006,057 (47.8%)
이전수입(억원)	749,718 (40.6%)	778,057 (40.3%)	858,760 (40.8%)
지방채(억원)	37,766 (2.0%)	22,757 (1.2%)	19,905 (0.9%)
보전수입 등(억원)	191,615 (10.4%)	195,465 (10.1%)	222,062 (10.5%)

이전수입의 구성내역

구분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율
지방교부세	378,699억원 (44.1%)	12.2%
국고보조금	480,061억원 (55.9%)	8.9%

이전재원 현황



* 출처 : 금창호외(2021). 연구원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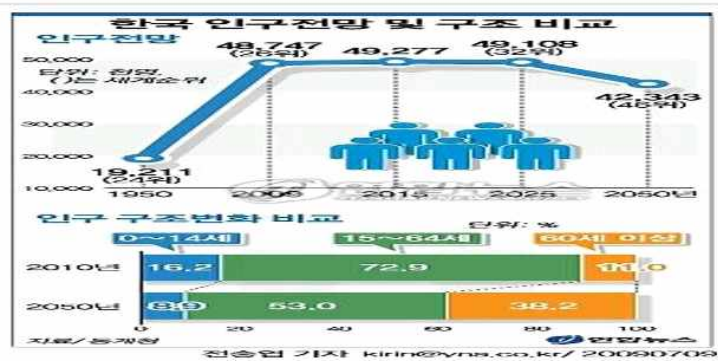
23/28

3.충남연구원의 역할과 미래발전 방향

24

미래의 환경변수

인구: 우리나라 2030
년 이후 점차 하향



과학기술



* 출처: 연합뉴스 및 다음블로그(<https://blog.daum.net/brilsymbio/13735916>)

25/28

미래의 환경변수

IT, IoT기술 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5대물결

1. 비디면화(Untact)
2. 탈경계화(Borderless)
3. 초맞춤화(Hyper-Customization)
4. 서비스화(Servitization)
5. 실시간화(Real time)

미래 비즈니스와
지역의 변화

- 사물인터넷과 비즈니스
- 스마트팜과 농업
- 지능형 로봇과 로봇산업
- 융복합과 소재산업
- 핀테크와 금융산업
- 지능혁명과 모빌리티산업
- 스마트 헬스케어와 헬스케어산업
- 로봇과 의료산업
- 스마트홈과 가전산업
- 스마트 공장과 제조업
- 3D 프린팅과 잠재산업
- RPA와 서비스산업
- 자율자동차와 자동차산업

* 출처 : 김광석 (2019) '디지털 경제지도'

26/28

미래의 환경변수

기후변화

- 온난화: 식생변화, 자연재해, 보건위기, 재해관리, 보건위생의 기능 강화 요구 (2040년 3.4 or 2.4도 상승 예측)



* 출처 : 그림;고정화 : <https://blog.naver.com/life84940/222227902948>

27/28

남북통일 기대

- 시기 단언 불가, But 통일이 성사될 경우 예측 불허의 획기적 변화 예상(전 분야에 걸쳐 급격한 변화 속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변화)

그림 12. 남북 경제협력 경로 및 12대 융합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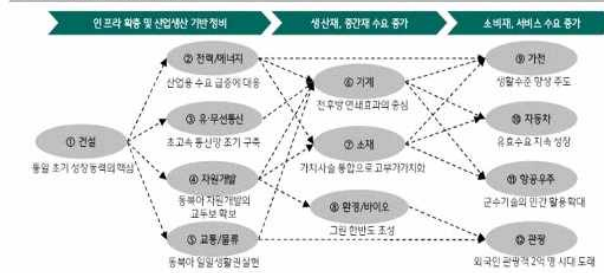


표 13. 북한은 사회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열악한 편. 산업 불균형 해소는 항만이나 발전시설에 대한 투자 및 확충이 선행되어야 할 것

주요 인프라	철도 총연장 (km)	지하철 총연장 (km)	도로 총연장 (km)	고속도로 총연장 (km)	항만 여객능력 (천톤)	발전 전력량 (억 kWh)	발전 설비 용량 (MW)
북한	5,299	34	26,176	776	37,000	216	7,253
남한	3,590	558	109,763	4,637	928,534	5,220	93,216
북한/남한 비율	1.47	0.06	0.24	0.17	0.04	0.04	0.08

* 출처 : <https://blog.naver.com/lch324/221275285313>

충남연구원의 역할과 미래발전

현 상황에 대한 직시

- 코로나19 상황 장기화 & 감염병 지속 발병
- 지역경제 침체
- 지역사회 고령화
- 지역 인구 감소 및 소멸 위기
- 연구원 운영의 혁신 요구



다가올 미래 준비

- 빠른 사회 환경 변화
- 과학기술의 고도화로 편리성 증대
- 행정서비스의 고품질화
- 지역주민의 수요 다양화 지속
- 주민참여 확대, 공동체 활성화
- 필요 없어지는 사람의 손
- 공공물가 상승, 1인 가구 증가(현 31.75)
- 행복도시의 급속한 성장과 확대

충남연구원의 역할과 미래발전

일본 지자체의 전략 2040 사례

목 차	주요 내용
1. 일본의 인구동향과 지자체별 인구변화	(1)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화와 출산감소에 따라 관(轄)별 인구구조 형성, 대부분 지자체 인구 감소, 규모가 작을수록 감소를 확대
2. 2040년에 발생할 개별 분야별 문제점 및 과제	(1) 육아/교육 - 학생 수 감소, 지방교육 여건 악화 (2) 의료/복지 - 독거노인 증가, 요양·간호인력 부족 (3) 인프라/공공교통 - 인프라 노후화, 공공요금 상승 (4) 도시관리 - 도시의 스펀지화 저밀도화 진행 (5) 노동력 -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6) 산업 - 제조·건설업 쇠퇴, 서비스업 중심 지방산업 형성
3. 2040년에 다가오는 일본의 내정위기	(1) 청년을 흡수하며 늘어가는 도교권과 일손을 잃은 지방권 (2) 표준적인 인생설계의 소멸과 교육·교육 기회의 상실 (3) 스펀지화하는 도시와 노후화되는 인프라
4. 지자체 혁신의 기반 방향	(1) 노동대체기술(사·로봇 등)의 적극적 활용 및 행정의 표준화·공통화를 통한 저비용·고 효율의 스마트 자치단체로의 전환 (2) 인간에 의한 공적기능 수행(위탁·협력)으로 행정 효율화 추진 (3) 단일 지자체가 아닌 권역 중심의 도시기능 활성화 및 업무와 민력의 공유·이전 활성화로 권역·기초간 이혼제 유연화 추진 (4) 수도권 내 도시들간 연계·협력력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고 일자리·주거·의료문 제 등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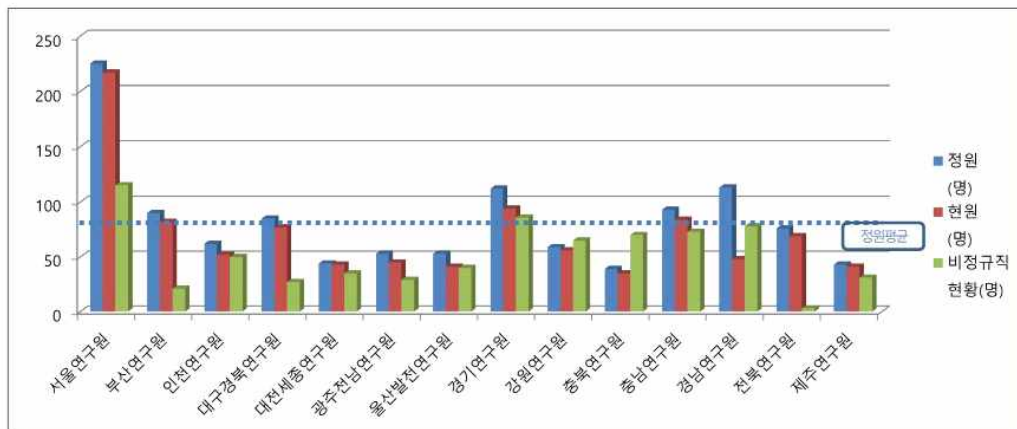
* 출처: 금창호외(2021) 연구원 내부 자료

30/28

충남연구원의 역할과 미래발전

충남연구원의 현재

- 충남연구원 정원 93, 현원 84, 비정규직 73
- 14개 시도연구원 정원 평균 81.9명
현원 평균 70.3명
비정규직 평균 51.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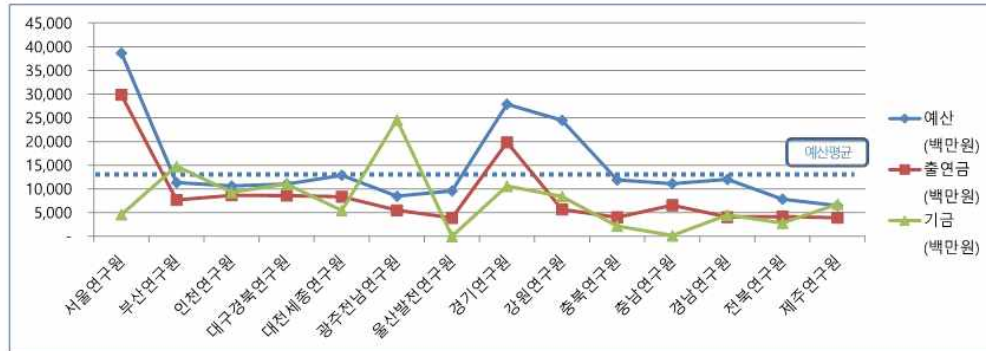
* 출처: 각 연구원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31/28

충남연구원의 역할과 미래발전

충남연구원의 현재

- 주요과제 : 수탁용역 수익감소, 재정 불안정
예 산 : 11,106백만원
출연금 : 6,560백만원
기 금 : 156백만원
- 14개 시도연구원 예 산 평균 14,589백만원
출연금평균 8,614.8백만원
기 금 평균 7,509.2백만원



* 출처 : 각 연구원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32/28

충남연구원의 역할과 미래발전

구분	대응전략 및 추진방향	
1. 역할구조의 개편	① 광역-기초-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버넌스 체계의 재편 재원 구조 개편(안정적 재원 확보, 시군 출연) 연구인력 대폭 확대(도 대표연구원으로 성장) 도의 관리감독 ⇒ 상생발전(정체성 확보)
	② 행정체제 개편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화 및 메가시티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행정구역통합(시군통합 등) 지자체간 연계협력
2. 지역발전 전략	③ 인구감소 선제 대응과 지역내 균형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련 제2공공기관 지방이전 연계 대안 행복도시를 핵으로 하는 지역내 균형발전 추진
3. 공급방식 체계 개편	④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의 선순환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방적 공급방식에서 탈피 민관연 협력체계 구축 새로운 과학기술 접목, 지역주민에 우선 주민자치, 공동체 활성화 등 지방의회와의 협력관계 시도연구원협의회와의 네트워크 강화

33/28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5 horizontal dotted lines.



행복한 미래를 여는 충남연구원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역사와 전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앞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풍요롭고 건강한 정신으로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충남도민의 모습입니다.
희망찬 충남의 미래를
충남연구원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